

멈춰선 MBC의 시계, 더는 지체할 수 없다

- 방문진은 즉각 차기 사장 선임 절차 착수하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지난 10일 출범했다. 방송3법 통과 이후 무려 11개월 만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정원의 과반수가 임명되면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사회 13명 중 과반, 10명이 임명된 새 방문진의 첫 회의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열흘 넘게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초침을 다투는 미디어 업계의 격변 속에서 공영방송 MBC의 시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무엇보다 지난 2월 안형준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넘게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채 리더십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지연된 절차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현장의 움직임은 분주했다. MBC 구성원들을 비롯해 MBC 시청자위원회, 학계·법조계는 방미통위 권고에 따라 지난달 26일 이전에 모든 이사 추천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방송3법 개정의 한 축이었던 정치권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 지원 공고만 낸 채 한 달 넘도록 아직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연 이유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조차 없다.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내팽개친 명백한 직무유기다. 더불어 민주당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공영방송의 조속한 정상화를 주장하며 방송3법 개정을 주도해 놓고, 정작 결격 여부조차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과거 대선 캠프 참여와 연임 경력 등이 드러나자 뒤늦게 후보 3명을 교체하고, 방미통위가 제시한 이사 추천 기한을 2주나 넘기는 등 부실 검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민주당이 방문진 이사 중 1인으로 추천한 오태규 후보가 이재명 대선 캠프 활동 이력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주 방미통위가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임명을 보류했는데도 현재까지 민주당은 ‘모르쇠’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끈다면 이대로 오 후보가 자동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법의 맹점에 기대어 그저 ‘뭉개기’로 시한을 넘기려는 것이, 그간 민주당이 주창한 공영방송 정상화의 실천인가. 지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비판했던 명분들은 대체 다 어디로 갔는가. 자기 진영 인사는 설사 흠결이 있더라도 눈감아주는 것이 ‘민주당식 언론개혁’인가. 만약 흠결이 없다면 정정당당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이다. 방미통위 또한 ‘의결 보류’라는 임시방편 뒤에만 숨어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은 사실 확인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방미통위는 신속히 오 후보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면 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미 한참을 지체했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 속에 방문진 이사회까지 표류해서는 안 된다. 당장 23일로 예정된 방문진 첫 회의가 흑역라도 공전을 거듭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MBC 구성원들 전체에게 돌아올 것이다. 방문진에 엄중히 촉구한다. 첫 회의에서 조속히 이사장부터 선출해, 차기 MBC 사장 선임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조합은 새로 출범한 방문진이 ‘시작부터 파행’이라는 오명을 자초하는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7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